

공공기관 2차 이전...전남광주 ‘기능 집적’ 필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남광주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이 갖춘 산업 기반과 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단지 및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를 근거로 지역 간 산업·경제 격차를 지적하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1370개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지역 산업단지는 121개로 전체의 8.8%

산업단지 121개로 전체 8.8% 불과...전국 최하위권

GRDP, 159조 수준...경제 규모도 수도권과 큰 격차

“AI·에너지·미래모빌리티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야”

를 차지했다.

지역별 산업단지 수는 영남권이 282개(20.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3개(15.5%), 대전·세종·충남 211개(15.4%), 대구·경북 184개(13.4%), 충북 153개(11.2%), 전남광주 121개(8.8%), 전북 91개(6.6%) 등의 순이었다.

지역 경제 규모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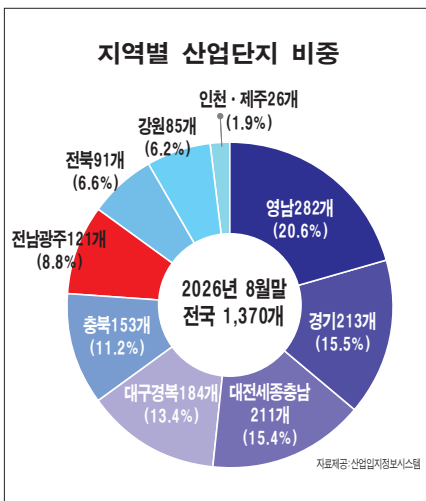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

651조4000억원, 서울 575조원에 달했다.

전남광주는 158조8000억원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경제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지역산업과 기관의 기능을 연결하는 ‘집적’이 주요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산업과 이전 기관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2차 이전에서는 관



련 기관을 특정 지역에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과 지역은 올해 10~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도 지역이 육성해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남의 에너지·석유화학·조선·철강·농수산업 등 기존 산업 기반과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에너지 등 신산업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결해 광역권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남광주는 산업단지 121개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관 이전보다는 이전 기관과 기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연결하는 후속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집적의 기준을 도시 규모가 아닌 기관의 기능을 받아낼 수 있는 산업 기반과 기능 적합성에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남광주처럼 광역권 차원에서

산업 기반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특정 도시 한 곳에 기관을 집중하기보다 기관의 기능에 따라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보다 어떤 기관을 유치하고, 기존 산업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희승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 격차를 바로잡을 가장 가까운 기회이고, 기능 적합성을 기준으로 균형성장 방향에도 맞는 길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기아 오토랜드광주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안전보건 상생협력 추진

협력사 14개사 대상...외부 컨설팅·물품 등 지원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시작합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협력업체의 산업체에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2026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아 오토랜드광주와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협

력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협력사의 재정 상태, 지원 요청 및 증대제에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사내 협력사 7개사, 사외 협력사 7개사 등 총 1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외부 컨설팅 또는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한다.

위험성 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 평가 기업을 전수하

고 실행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보건 물품 지원에서는 자동제세동기(AED)와 안전화, 보호장구 등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해 협력사 현장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의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 및 물품을 구매 지원하고, 11월에

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 상생협력사업 총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사업비는 기아 오토랜드광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 부담을 하며 물품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선 집행, 사업 종료 후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관계자는 “이번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업계 전체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제네시스, SUV GV80 하이브리드 출시

주행성능·연비·EV 감성까지...후륜 2.5 터보 시스템 탑재

제네시스가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GV80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GV80 하이브리드는 2.5 터보 엔진에, 엔진 시동 및 발전을 담당하는 시동 모터(P1)와 구동 및 회생제동을 담당하는 최고 출력 59.1kW의 구동 모터(P2)를 병렬형 구조를 적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네시스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GV80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 352마력(PS)으로 GV80 2.5 터보 모델의 304마력(PS) 대비 최고 출력이 약 16% 증대됐다.

또 GV80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19인치 2WD 5인승 모델 기준 12km/ℓ로 GV80 2.5 터보 모델 대비 약 29% 개선됐다.

제네시스는 GV80 하이브리드에 기존 3.5 터보 모델의 고용량 후륜 8단 변속기를 기반으로 구조를 최적화해 변속기 전장을 대폭 축소하고 동력 전달 효율을 높인 신규 7단 변속기를 적용 탑재했다. 또 변속기의 1단 기어비를 높여 엔진 개입 없이 P2 모터를 역방향으로 구동시켜 차량을 후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GV80 하이브리드는 연구소 자체 시험 기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1초만에 가속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했으며, 복합연비와 연료탱크 용량 76ℓ를 고려할 경우 1회 주유로 최대 약 912km를 주행할 수 있어 강력한 동력성능과 우수한 효율성으로 고객에게 여유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네시스는 GV80 하이브리드에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로 수냉식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 배터리의 더 높은 최대 방전 출력을 확보하고, 배터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GV80 하이브리드의 모터 구동 영역을 확대해 정속한 주행환경과 선행적인 가속감을 구현하고 전기차 수준의 주행감성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지하 주차장과 같이 소음이 두드러지는 곳에 주차 후 다시 출발할 때 엔진 구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직후 초기 약 30km/h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모터를 활용한 EV 모드 주행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주암댐 수력발전량 30.6% ↓...매출도 뒷걸음

올해 생산량 3만9363MWh...2년 새 1만7369MWh 감소

전남광주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의 수력발전량이 2년 새 30% 넘게 줄면서 전력 판매 수입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암댐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3만9363MWh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4년 같은 기간(5만6732MWh)과 견줘 30.6%(1만7369MWh)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생산량은 4만4188MWh로, 올해도 전년보다 10.9%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발전량 감소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주암댐 수력발전 매출은 2024년 1~7월 79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2600만원, 올해 53억7300만원으로 줄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억9900만원(32.6%) 감소했으며 지난해보다도 7억5300만원(12.3%) 줄었다.

수력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축소됐다. 주암댐의 온실가스 저감량(tCO₂e)은 2024년 1~7월 2만6063tCO₂e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99tCO₂e, 올해 1만8083tCO₂e으로 감소했다. 2년 새 7980tCO₂e(30.6%) 줄어든 것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레미콘값 상승...건설현장·제조업계 부담 가중

광주권 공급가 m³당 4400원 ↑...운반비도 회당 6000원 올라 8차례 협상 끝 합의...원자재 인상분 반영 부족 수익 개선 난항

전남광주 레미콘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건설현장의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재와 운송비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격 협상 타결로 공급단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건설경기 침체 속 자체 가격이 오르고 업계는 인상폭이 비용 상승분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 양측의 경영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역 레미콘업체와 대한건설자재지협회의는 8차례 협상 끝에 올해 광주권 레미콘 공급가격을 m³당 44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은 지난해 10만

6300원에서 올해 11만700원으로 약 4.1% 올랐다. 적용 지역은 광주·장성·담양·화순으로, 조정된 가격은 지난달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전남 동부권인 여수·순천·광양은 앞서 지난 6월부터 같은 규모의 공급가격을 m³당 11만4900원으로 조정했다. 총전보다 4500원, 약 4.1% 오른 금액이다.

광주권 가격 협상은 인상폭과 적용 시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장기화했다. 양측은 가격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7차례 협상까지 결렬됐고, 지난달 18일 열린 8차례 협상에서 최종 합의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가격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건설업체와 지난해 단가 인화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는 레미콘업체의 입장이 맞물린 결과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레미콘 제조업체에는 운반비 인상도 부담이다. 광주·나주·장성·담양·화순의 레미콘 운반비는 1회당 7만3000원에서 7만9000원으로 6000원 올랐다. 인상률은 약 8.2%로 광주권 레미콘 공급가격 인상을 보다 높다.

운송료를 둘러싼 노사 협상에서는 지입 차량이 레미콘을 한 차례 운반할 때 받는 금액을 6000원 올리고, 임대차 방식으로 운영하는 장비의 하루 임대료를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 역시 8차례 교섭 끝에 합의하면서 사흘간 이어진 총파업이 종료돼 공급 중단 장기화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레미콘업체는 운송 파업 종료로 공급가격 협상 타결에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운송비 인상분에 올해 추가 인상분까지 누적된 데다 모래·자갈·혼화제 등 원자재 가격도 올라 이번 가격 조정으로는 비용 상승분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안전과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고품질 골재 사용 요구가 까다로워지면서 양질의 모래·자갈을 확보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조합은 밝혔다.

레미콘 공급가격은 원자재와 생산·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반영해 조정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레미콘업체가 인상안을 제시한 뒤 건설업체와 협의해 최종 인상을 결정한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누적된 원가 상승분과 지난해 단가 인화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광주권 협상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내 후속 단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